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진현



필자의 대학후배인 미혼의 J(37)는 광고홍보분야에서는 제법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이다. 대학졸업 후 전공을 살려 서울의 유명 광고회사에 취직 후 10여년간 일의 유망 광고회사에 취직 후 10여년간 일에 대한 열정을 쏟은 덕분에 역대급 연봉을 받는 흔치 않는, 귀족 샐러리맨이 됐다. 톡톡 튀는 감각과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광고업계의 특성상 종종 헤드헌터(head hunter·전문인력을 기업체에 소개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귀가 솔깃할 만큼의 달콤한 제안을 받기도 한다.

에 싱글로 버려 자신의 에너지를 오롯이 일에만 쏟아 부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능력있는 직장 선후배들이 결혼과 출산 등을 이유로 회사를 떠나야 했던 현실을 슬하하게 본 그가 내린 차선의 선택이었던 것

출산은 미친 짓(?)이다

이다. 요즘 우리 주위에는 J와 같은 미혼여성들이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일과 가정이란 갈림길에서 전자를 택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미혼여성들의 결혼의식조사'도 이 같은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다. 25~39세 미혼여성 1천204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509명이 '결혼을 꼭 할 필요가 없다'거나 '아예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답했다. 결혼을 필수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이

시대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는 우리 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대표적인 징후가 바로 저출산이다.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15~49세까지의 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은 1.08명. 전 세계 평균(2.6명·유엔 인구기금기준)과 선진국 평균(1.57명)에 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현상은 결혼 자체를 기피 또는 늦게 하는데다,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출산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한 명만 낳는 여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원인과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기본계획'은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

이 기본계획의 핵심은 아동수당제 도입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 요컨대, 내년부터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는 아이 한 명당 매달 1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 액발이 먹힐지

"글쎄"다. 왜 자녀를 낳지 않는가에 대한 맥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이 저출산 해법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출산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결혼 및 출산지연을 꼽는다. 이 같은 배경에는 청년층의 고용불안, 여성취업 및 의식의 변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 구조적인 사회·문화요인이 맞물려 있다.

따라서 저출산은 금전적 지원과 같은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난치병이다. 특히 지금처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결혼=무덤'이라고 여기는 풍토에서, 금전적지원을 앞세운 '출산율카드'는 자칫 무모한 배팅으로 끝날 수 있다.

저출산이라는 대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은 인생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육아를 여성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의식의 대전환과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같은 양성평등 문화가 저변에 깔려있지 않는 한,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장미빛 청사진은 유훈기한이 짧은 프로젝트로 수명을 다할지 모른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아시아 문화전당 축소되는가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외곽 주차장 건립이 백지화되고 대신 내부 주차장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고 한다.

최근 문광부에서 열린 '문화전당 기본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문화전당 외곽주차장 조성을 포기하고 내부 주차장 규모를 당초 보다 6배나 늘리기로 했다. 기획예산처가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300여억원이 소요되는 외곽주차장 조성 대신 내부 주차장 확대를 강하게 요구해 설계자가 이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부는 애초 문화전당 내부 주차장을 100대 규모로 조성해 필수 차량 통행만을 허용하는 대신 1~2km 떨어진 곳에 외곽주차장 4곳을 조성, 문화전당 관광과 금남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 예정이었다. 이는 주변 차량을 통제하고 시민공원을 조성해 문화전당을 자연친화형의 도심 속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외부주차장 없이 문화전당에 일반 건물과 동일한 기준의 주차장을 만든다면 교통혼잡은 물론이고 열린 공간 목표도 한 전당의 기능은 상실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차량의 통제 없는 시민공원 조성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광부의 이번 기본설계안은 정부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자체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특히 지난달 2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당 건립일정 조정, 지역성 사업의 지방비 투자, 특별법에 명기된 특별회계 조항 삭제 등을 결정한 바 있어 더욱 그렇다.

광주의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호남 소외를 극복하고 광주를 아시아문화예술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당초의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서두를 일 아니다

미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시 작전권 환수시기가 오는 2009년쯤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의 부분 감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전시 작전권 반환시점이다. 미국이 밝힌 2009년은 한국이 제의한 2012년보다 3년이나 앞당긴 것으로 과연 우리가 3년 안에 전시 작전권 자체 수행 능력을 구비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2011년까지 국방중기계획이 완료되면 전시 작전권 환수를 위한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첨단무기 도입에만 10~15년이 걸린다면 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의 자주국방력 강화 속도 등을 감안할 때 후자 쪽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 감축문제다. 미국은 상당한 규모의 감축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여전히 허락할 경우가 오는 2009년쯤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의 부분 감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작전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에는 변함이 없다는 한국 국방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은 그 규모를 떠나 한반도의 현재 안보상황과 한국 국방력의 능력에 비해 때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언젠가는 환수돼야 한다. 그러나 북핵 위협과 군사적 대치상황에 상존하고 우리의 국방·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아직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안위가 걸려 있는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충분한 논의와 함께 주도면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박행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 내 대학 구성원들이 일심으로 협력하여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유지에 성공했다. 수도권에 있는 전국센터에 이어 처음으로 지역센터 2개를 선정하는데 우리가 맨 처음 선정된데 대하여 기쁨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서 법률적 근거위에 생긴 장치임을 애써 부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는 약자를 보호하고 자하는 시혜 차원만은 결코 아니다. 정보화시대로 접어드는 21세기는 과거에

기술전문여성인력 양성, 광주·전남지역의 특화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 유망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기회 제공 및 정책 제안 등을 하려고 한다. 지역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기업체, 경영인, 언론과 기타 유관기관들의 총체적인 협력이 요구되며, 특히 남성동반자들의 이해와 격려가 필요하다. 또 지역센터의 직접적 수혜자인 여성학·석·박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때로 과학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과학의 발달을 최상의 목표로

모성과학(母性科學)

힉과 카리스마로 대변되는 남성중심 무대에 섬세하고 예리한 여성의 등장, 특히 여성과학자들의 역할과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한다. 즉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는 국가의 발전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인 것이다. '국가 미래는 여성인력의 활용에 달려있다'는 캐치프레이즈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며 바른 판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는 지역의 발전, 더 나아가서 국가의 발전에 공헌해야함과 동시에 향후 선정될 지역센터들의 모델 역할도 해야 한다. 지역센터에서는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소지한 여성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들에게 추가적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으로 경력을 향상시키며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공분야에 연결시키는 역할, 과학

기술전문여성인력 양성, 광주·전남지역의 특화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 유망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기회 제공 및 정책 제안 등을 하려고 한다. 지역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기업체, 경영인, 언론과 기타 유관기관들의 총체적인 협력이 요구되며, 특히 남성동반자들의 이해와 격려가 필요하다. 또 지역센터의 직접적 수혜자인 여성학·석·박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때로 과학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과학의 발달을 최상의 목표로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교수·2005년 10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신는 코너입니다.

운전자 사고 책임, 악용막을 대책필요

며칠 전 퇴근후 차를 몰고 집에 가다 마을 앞길에서 롤러 브레이크를 타는 아이를 보고 불안해 미리 정지시킨 뒤 아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롤러브레이크를 타던 아이가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달려오다가 이미 정지해 있는 내차 앞 범퍼 부분에 부딪혔다. 다행히 "다친 곳이 없다"고 해 안심은 됐는데 혹시 몰라 아이 엄마에게 연락, 상황이 이러하니 병원에 데리고 가야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 엄마는 대뜸 "당신이 운전자를 똑바

로 못해서 아이를 쳐놓고는 판소리 하느냐"며 큰소리 치는 것 아닌가. 어처구니가 없었다. 분명히 아이들이 잘못했는데 운전한 게 죄라고 운전자 사고 책임을 다 지는 일이 가끔 있다. 물론 운전자로서 보행자, 특히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일부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정현창·광주시 광산구 왕동

광주일보를 읽고

교장 공모제에 대한 오해

광주일보 7월 28일자 19면 "교장 공모' 확대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읽고 이 글을 쓴다.

한 생애를 교육계에서 봉직하고 퇴직한 교육자로서 이 글을 읽었을 때 어안이 빙빙했다. '오늘의 교육현장에 이런 교장이 학교책임자로 있다면 과연 조용히 버텨낼 수 있을까' 라는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다. 내용인즉 현행 교장승진제도 하에서 임용된 교장의 학교운영이 무사안일한 복지부동으로 일관되고 있으며, 비전 없는 무능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교장 공모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글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반대하는 수학여행 지역을 교장이 고집 하는 것 ▲학생들의 등교시 교문지도 인원을 최소화하여 명량한 기본으로 등교토록 하자는 건의를 거부하고 학생들은 호되게 다루어야 한다고 고집 하는 것 ▲학교성만을 강조하고 잘못된 호기심과 명예, 지배욕에서 출발하는 과학의 끝은 부도덕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인류 파괴를 현실화 할 수도 있는 부정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가 진정 추구해야하는 과학은 차갑고 냉철한 두뇌와 함께 공동체를 사랑하고 약자를 돌아보며 따뜻한 가슴으로 행동하는 인격적 과학, 즉 살리는 과학,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건설적 과학, 다른 표현으로 모성(母性)과학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오늘의 각급학교 운영양상에서 보면, 학생수학여행이나 앨범·생활지도 사항 등에서 학교장의 독선은 거의 사라진

것이 현실이다. 담당교사들의 창안과 합의에 의한 안전이 확보되어 부의되며 학운위에서 결정되면 이를 거부한 교장은 누구도 없다.

학교급식 역시 현행상황이 고교 일부를 제외하고는 학교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위 학교장이 "사고 나면 나는 책임 못 진다. 학생들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그 일 많고 귀찮은 것을 누가 할니까" 라는 말이 학교장 입에서 나올 정도의 천박한 교장은 아직도 많고 나타나 있을 수도 없으며, 만약 있다면 '황우일모(黃牛一毛)'격일 것이다.

그런 교장은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는 현장의 상황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현장의 교장들은 교육에 보다 많은 공헌을 하려고 누구나 열심히 뛰고 있다고 믿는다.

다져진 제도의 흐름에서 사소한 역행 사례가 있다고 해서 표면화된 전통적 제도의 뿌리를 건드리라는 것은 혼란만을 초조할 뿐이다.

학교장 공모제를 시행하겠다는 교육 인적자원부의 시책에 대해 무릇 교육현장의 교원들은 대경실색하여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다. 그런데도 그것을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고집인 것 같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학교장 공모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제도개선의 순리에 맞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억지제로 라고 믿어진다.

학교장 공모제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교육에 미치는 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믿기 때문이다. ▲장정식·수필가·전 광주동부교육장

불임부부 시술비 평균소득 기준·지원액 재조정 해야

불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 여성 나이가 44세 이하로 월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불임 부부가 지원 대상 기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월 소득기준이 정부 기준을 넘고 있고 맞벌이가 대다수인 만큼 정부가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부들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 불임부부들도 정부의 시술비 지원이 '그림의 떡'이기는 마찬가지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 금액은 시술비의 절반밖에

안 돼 나머지 비용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선정 기준이 비현실적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당초 소득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돼 신청자가 적을 것이라고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수차례 지적했는데 여지껏 그대로다. 세계 최고의 고령자 증가 추세에 출산속도도 최저 수준인 나라다.

정부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평균소득 기준과 지원액을 재조정하고 지원 신청자들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서야 한다.

▲류용규·광주시 남구 서동

無等鼓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다 10원 동전이 최근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10원 동전의 사용은 감소 추세다. 카드사용이 늘고, 각종 요금의 자동이체가 일반화되면서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10원 동전 거스름돈을 받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 졌다.

오죽했으면 네티즌들 사이에서 '10원 동전활용법'이 유행했을까. 동전 속의 구리가 신발의 냄새를 없애고, 전자파를 흡수하고, 꽃병의 꽃을 시들지 않게 한다는 것인데, 근거 없는 얘기다.

10원 동전이 처음 선을 보였던 1966년 만 해도 동전 두 닢이면 자장면 한 그릇을 사먹을 수 있었다. 또 아이들은 여짜도 용돈으로 동전 한 닢을 받으면 종이 싱글빙글하며 평소 갖고 싶었던 것을 사곤 했다. 10원의 가치가 그만큼 컸었다.

10원 동전은 구실수에 휘말린 적도 있다. 1983년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 도안을 변경할 때 중간 부위에 돌사자상을 새겨넣었는데, 당시 대선과 맞물려

'불교신자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풍문이 퍼지면서 파란을 일으켰다. 10원의 위력이 엉뚱한 곳에 번졌던 일화다.

그런데 최근 구미값 상승으로 10원 동전이 원재료로 사용되는 페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국은행이 현행 10원짜리 재료 크기를 바꿔 새 주화를 내놓기로 했다. 이에 사재기가 극성을 부려 10원 교환 동전활용법'이 유행했을까. 동전 속의 구리가 신발의 냄새를 없애고, 전자파를 흡수하고, 꽃병의 꽃을 시들지 않게 한다는 것인데, 근거 없는 얘기다.

10원 동전



10원 동전 인기는 온라인에서 더욱 심하다. 일부 경제사이트에서 액면가격 2만원인 10원 동전 2천개가 20만원이 넘는 가격까지 치솟았다. 일부 적동색 10원 동전은 80만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이에 한국은행

은 실수요자가 아닌 수집목적의 교환을 금하도록 시중은행에 당부까지 했다. '불혹'의 나이가 된 10원 동전이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실용성 차원에서 폐기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10원 동전의 앞날이 궁금해진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業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 2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경 제 부 2200-617 여권재부 2200-628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77)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디 제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일 2 부 2200-552 <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